

---

# 국외출장보고서

---

2018. 11.

## 국외출장 보고

<[수탁 1]비전 사회보장2040 및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수립> &  
<[수탁 2]빈곤해소를 위한 소득보장 강화방안연구>

### □ 출장목적

- 프랑스 및 스웨덴 사회보장체계 개편동향에 대한 인터뷰/자료수집
  - 2017년 이후 구조개편과정에 있는 프랑스 사회보장체계 중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개편방안에 대한 자료수집
  - 스웨덴의 사회보장체계 개혁전략 진단과 최근 동향 파악
- 양국의 사회보장체계 개편동향과 관련해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과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일 시 : 2018년 10월 21일 ~ 2018년 10월 29일 (7박9일)

□ 출장국가 및 도시 : 프랑스/파리, 스웨덴/스톡홀름, 갈마르

□ 출장자 :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 □ 일별 방문자 및 면담 주요내용

| 회의 | 일시           | 행선지       | 방문기관/면담자                                 | 주요내용                                                                                                           |
|----|--------------|-----------|------------------------------------------|----------------------------------------------------------------------------------------------------------------|
|    | 10.21<br>(일) | 인천-프랑스 파리 | 이동                                       |                                                                                                                |
| 1  | 10.22<br>(월) | 프랑스 파리    | Science-PO de Paris (prof. Bruno Palier) | - 10:00~12:00 Bruno Palier교수<br>마크롱 정부의 사회보장체계 개편정책 관련 인터뷰.<br>2018년 공적연금제도 개편의 쟁점                             |
| 2  |              | 프랑스 파리    | EHESS (prof. Serge Paugam)               | - 15:00~18:00 Serge Paugam교수<br>빈곤문제 전문가 인터뷰. RSA를 중심으로 한<br>Minima sociaux 개편동향. 근로능력이 있는<br>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외 쟁점 |

|   |              |              |                                                                        |                                                                                                                       |
|---|--------------|--------------|------------------------------------------------------------------------|-----------------------------------------------------------------------------------------------------------------------|
| 3 | 10.23<br>(화) | 프랑스<br>파리    | Depart. des Minima<br>sociaux (C.<br>Gasancon )                        | - 09:30~11:30 Claire Gasancon 국장<br>프랑스 사회부조제도 관련해서 프랑스 부처차원의 대<br>응방향과 주요 쟁점. 구직노력에 대한 조건강화 및<br>제도 재구조화 문제          |
| 4 |              | 프랑스<br>파리    | DREES<br>(docteur Mathieu<br>Calvo)                                    | - 14:00~17:00 Mathieu Calvo 박사<br>국책연구기관 전문가의 RSA 수급자의 최근 수급동<br>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논의                               |
|   | 10.24<br>(수) | 파리-스톡<br>홀름  | 이동                                                                     |                                                                                                                       |
| 1 | 10.24<br>(수) | 스웨덴/<br>스톡홀름 | Stockholms<br>universitet<br>(prof. M.Sallnas)<br>& Prof. T. Lundström | - 15:00~16:30 Marie Sallnas 교수<br>스웨덴 아동복지의 현황과 전망 취약아동의 보호권에<br>대한 참여 최근의 아동보호권리협약(CRC)에 기초한<br>스웨덴아도정책의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 |
| 2 | 10.24<br>(수) | 스웨덴/<br>스톡홀름 | Uppsala University<br>(홍희정 박사)                                         | - 17:30~20:00 홍희정 박사<br>스웨덴의 사회서비스전달체계와 한국의 사회서비스전<br>달체계의 비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과 관계                                      |
| 3 | 10.25<br>(목) | 스웨덴/<br>스톡홀름 | Stockholm univ<br>(prof. E. Wadensijjo),                               | - 10:00~12:00 Eskil Wadensijjo 교수<br>스톡홀름대 사회정책연구소의 교수로 스웨덴 사회보<br>장 개혁과정의 쟁점과 최근 사회적 우경화 문제                          |
| 4 | 10.25<br>(목) | 스웨덴/<br>스톡홀름 | Lidingö Stad<br>(Young Hee Youn))                                      | - 16:00~18:00<br>스웨덴 지방정부의 사회부조 수급자 및 사회서비스<br>전달체계의 기본구조와 특징. 지자체 거버넌스와 담<br>당자의 정책적 자율성                             |
| 5 | 10.26<br>(금) | 스웨덴/<br>스톡홀름 | Stockholms<br>universitet<br>(변영환 박사)                                  | - 10:00~12_00 변영환 박사<br>스웨덴 복지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복지태도 변화에<br>대한 해석. 최근 사회보장제도 개혁의제 중 한국에<br>시사점이 있는 쟁점                       |
| 6 | 10.26<br>(금) | 스웨덴/<br>칼마르  | Scandinavian<br>Institute for Policy<br>Studies<br>(최연혁 교수)            | - 17:00~20:00 최연혁 교수 외<br>1930년대 이후 스웨덴 사회보장 개혁의 각 단계별<br>핵심 비전과 주요 전략. 그것이 한국 사회보장 기본<br>계획에 주는 시사점                  |
|   | 10.27<br>(토) | 칼마르-스<br>톡홀름 | 이동                                                                     |                                                                                                                       |
| 7 | 10.27<br>(토) | 스웨덴/<br>스톡홀름 | Stockholms<br>universitet<br>(변영환 박사)                                  | - 19:00~21:00 변영환 박사<br>스웨덴 고용보험과 관련된 최근 개편동향 및 내각구<br>성에 따른 향후 전망 등                                                  |

## 1. 프랑스

### ■ 미팅 1 (프랑스)

□ 일시: 2018.10.22.(월) 10:00-12:00

□ 장소: Science-PO de Paris

□ 참석자: [원내]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원외] Bruno Palier 교수(Science-PO de Paris)

□ 회의내용

○ 마크롱 정부의 사회보장체계 개편정책의 동향

- 2017년 집권한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7월 당시 핵심 사회보험제도 개편을 발표하였지만, 공적연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매우 주저하는 태도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8년 중반이후 각종 공론위원회 등을 통해 공적연금제도 개편을 위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각종 직능집단별로 분산된 공적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2018년 공적연금제도 개편의 쟁점

- 프랑스 공적연금을 받는 상위 60% 퇴직자들에게 사회보장세(CSG)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해 격렬한 저항이 있는 상황. 현재의 소득상황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조치이나 정치적 갈등
-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을 포함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개연성

### ■ 미팅 2 (프랑스)

□ 일시: 2018.10.22.(월) 15:00-18:00

□ 장소: EHESS 인근 카페

□ 참석자: [원내]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 [원외] Serge Paugan 교수(EHESS, 사회과학그랑제꼴)

□ 회의내용

○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있는 빈곤문제 전문가와의 인터뷰.

- 1990년대 중반 프랑스 사회가 RMI를 도입한 것은 근로빈곤층에게 소득재분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조치. 하지만 2000년대이후 지속적으로 근로조건을 강화하는 개혁이 진행
- 이러한 개혁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강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조치. RSA의 지속적인 개혁이 이를 반영

○ 최근 Minima sociaux 관련 개혁 동향

- RSA를 중심으로 한 Minima sociaux는 현 정부 들어서도 강한 개편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이미 Sarkozy 정부 하에서 구직활동과 연계한 강력한 조건부과가 이루어져 시행중
- RSA와 관련된 개혁은 주로 Pole Emploi, 즉 고용센터의 개편된 조직을 중심으로 복지수급자의 구직의무를 강화하는 조치이며, 이는 근로빈곤층 대책과 관련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
- 따라서 마크롱 정부 또한 근로빈곤층 대상 사회부조제도를 더 강력하게 개편하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임

○ 정치적 우경화와 빈곤대책의 경직화

- 프랑스에서 빈곤정책을 보다 엄격하게 유지하려는 저변에는 이민자들이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그리고 최근 동유럽의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프랑스의 세계시민주의와 연대성의 철학은 이민물결과 생활상의 충돌로 인해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

### ■ 미팅 3 (프랑스)

□ 일시: 2018.10.23.(화) 09:30-11:30

□ 장소: St. Paul 역 인근 카페

□ 참석자: [원내]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원외] Claire Gasancon 국장 (Depart. des Minima sociaux)

□ 회의내용

#### ○ 최근 프랑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편전략

- 프랑스 경제상황과 사회보장제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특히 사회보험 제도가 야기하는 배제집단의 증가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의 이행을 준비할 상황
- 문제는 프랑스 사회보장제도가 어떠한 형태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 최근 논란은 영국식 제도인지 90년대 이전의 스웨덴 제도인지 하는 점

#### ○ 프랑스 사회부조제도 관련해서 프랑스 부처차원의 대응방향

- 2017년 방문 때와 달라진 점은 지난해에는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개혁방향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대선공약에서도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2018년에 들어서면서 거의 모든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가 주요한 개혁과제로 포함된 상황. 이 과정에서 사회부조제도를 둘러싼 오랜 개편의제 중 하나인 근로빈곤층 대상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통합 문제도 다시 논의되는 상황
- 하지만 제도통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보다 근로빈곤층 복지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 미팅 4 (프랑스)

□ 일시: 2018.10.23.(화) 14:30-17:00

□ 장소: Les Halles 인근 카페

□ 참석자: [원내]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원외] Mathieu Calvo 박사 (DREES)

### □ 회의내용

- 프랑스의 사회보장 관련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DREES의 사회부조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 특히 수급자 분석 전문가
- 프랑스 RSA 수급자의 최근 동향
  - 프랑스의 근로빈곤층 복지수급자는 2018년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16년 이후 최초로 감소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전문가들이 그 의미를 분석하였음
  - 가장 큰 이유는 RSA 수급자가 근로빈곤층이라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같은 맥락에서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ASS 수급자 또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됨
- 수급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논의
  - 프랑스 사회에서 근로빈곤층 복지수급자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그것은 노인이나 아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외국 이민인구의 증가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이는 빈곤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가 앞으로 더욱 엄격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다만, 학문적으로 프랑스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최근 연구관심은 왜 프랑스 빈곤층이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가 하는 점
  - 많은 빈곤층이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현상, 즉 non-recours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고 있음.

- 이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이 보다 쉽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모색으로 이어지고 있음

## 2. 스웨덴

### ■ 미팅 1 (스웨덴)

□ 일시: 2018.10.24.(수) 15:00-16:30

□ 장소: Stockholm University

□ 참석자: [원내] 류정희 연구위원, 노대명 연구위원

[원외] Marie Sallnas, Prof. Tommy Lundstrom,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김이진 전문위원(사보위)

□ 회의내용

- 회의의 주된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분권화가 잘 이루어진 스웨덴 사례에 대한 설명. 특히 아동보호체계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
  - 아동보호체계와 관련된 질문은 류정희 연구위원이 제기하고 논의
-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강점에 대해 질문 (특히 프랑스의 최근 제도개편 동향과 연동하여 질문)
  - (질문요지) 프랑스가 최근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 중심체계에서 보편적 체계로 개편하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스웨덴 식의 개편을 논의하고 있음. 그에 대한 의견은?
- 인터뷰에 응한 스웨덴 교수들은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강점은 지방정부의 재정기반과 지방정부의 정치가들이 주도하는 시민과의 원활한 정책협의 거버넌스라고 강조
  - 지방정부가 자체세수를 기반으로 강력한 사회보장정책, 특히 사회적



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말해주며,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어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 미팅 2 (스웨덴)

□ 일시: 2018.10.24.(수) 17:30-19:30

□ 장소: Stockholm 중앙역 인근 식당

□ 참석자: [원내]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류정희 연구위원

[원외] 홍희정 박사( Uppsala University),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김이진 전문위원(사보위)

□ 회의내용

### ○ 스웨덴의 지방분권제 최근 현황

-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 대등한 국가였으나 최근 난민의 급격한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 심각한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 지역간 갈등양상이 고조
- 난민유입으로 인해 지역의 세원 징수 실정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지역 간 갈등이 발생

### ○ 스웨덴 지방분권의 역사와 구조

- 1862년 기초자치단체 개혁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및 재정 분립이 이루어짐
- 현재 스웨덴은 20여개의 광역자치단체(Landsting och regioner)와 290개의 기초자치단체(Kommuner)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광역자치단체는 의료 및 교통 등 규모가 큰 지역의 공동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

-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복지 서비스(노인, 장애인, 사회복지 등), 보육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 등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민 복지 서비스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이며 보건 돌봄 서비스와 같은 보편적 복지서비스는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의 형평을 유지

#### ○ 스웨덴 지방분권의 특징

-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독립.
- 자치단체의 세입은 소득세 60~70%, 중앙정부 보조금 15~20%, 기타 소득이 차지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자치단체 스스로 세율을 결정하는 지방 소득세, 중앙정부 교부금, 기타소득(서비스 기관 이용 수수료 등)으로 구성
- 소득세율은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기초의회에서 결정하며, 징수한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의회에서 결정
- 스웨덴의 기초자치단체들의 세입세출은 지역민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구조화, 제도화됨

#### ○ 난민유입과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편차해소를 위한 정책대응

- 2015년을 기점으로 스웨덴에서는 급증하는 난민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자치단체의 기존 사업이 지장 받지 않도록 일부 지역에 특별보조금을 지원
- 부자인 자치단체가 가난한 자치단체를 돕는 “로빈후드세”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 노력
- 중앙정부는 사회통합과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추진

### ■ 미팅 3 (스웨덴)

□ 일시: 2018.10.25.(목) 10:00-13:00

□ 장소: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Stockholm Univ.)

□ 참석자: [원내]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원외] Eskil Wadensjjo 교수 (SISR)

□ 회의내용

○ Wadensjjo교수는 스톡홀름대 사회정책연구소의 대표적 사회보장분야 전문가이며, 1990년대 이후 사회보장체계 개혁과정에 대한 전문가

○ 스웨덴 정치사회체계의 최근 동향

- 스웨덴은 과거 어느 때보다 증가하는 이민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파정치세력의 영향력 증가가 큰 변수라고 말할 수 있음
- 현재 사민당 출신의 총리가 사임하면서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만일 극우파가 더욱 영향력을 반영한다면,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더욱 후퇴할 수 있는 소지 또한 존재

○ 1990년대 스웨덴 사회보장체계 개혁의 함의

- 1990년대 스웨덴 사회보장체계 개혁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음
- 문제는 이러한 개혁의 충격이 시민들에게는 매우 직접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는 것임. 그것은 공적연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혜택의 감소로 나타났기 때문임.
- 이는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그것은 맞벌이로 일하고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상 생계를 지탱하기 매우 힘들다는 것임. 이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이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출산휴가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1990년대 스웨덴 공적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관대성

- 스웨덴 공무원 연금 등이 매우 관대한 것 같음.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가(질문)

- 스웨덴의 공무원 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은 사실. 하지만 실제 임금수준 측면에서는 민간부문 노동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따라서 근로연령기 낮은 근로소득에 대한 노후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스웨덴 사회보장 또는 사회정책의 현안

-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질문) 비해, 스웨덴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이는 핀란드와도 다른 상황
- 지난 수년간 스웨덴 한 국회의원이 기본소득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이는 실제 법안이나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 ■ 미팅 4 (스웨덴)

□ 일시: 2018.10.25.(목) 16:00-18:00

□ 장소: Lidingö Stad

□ 참석자: [원내]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류정희 연구위원

[원외 Young Hee Youn(Lidingö Stad), 김이진 전문위원(사보위)]

□ 회의내용

○ 아동·청소년담당 사회복지공무원 체계

- 사회복지담당공무원(Social worker): Lidingö의 경우 인구 4만7천 여명을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사 15명이 담당(조사)하고 있음. 대략 사회복지사 1명당 20~30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음.
- 사회복지공무원은 아동·청소년·가족, 노인, 장애인 등의 각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 분야의 조사부터 종결까지 담당하고 있음. 또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사, 전문가 등이 Kommun의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있음.
- 원할 경우 본인의 관심 분야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으며 (순환보

직의 제한이 없음), 전문성을 위한 교육(대학원, 외부강사 초청 등)도 제공받을 수 있음.

○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서비스 제공

- 개인이 원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여 민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는 공공에서 제공되며,
- 공공서비스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외부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됨. 이 때의 비용은 Kommun 또는 Ländsting에서 지불하며, 개인부담은 없음.

○ 아동·가족의 사례관리 및 대안양육체계, 사후관리

- 아동·가족의 사례조사를 담당한 사회복지사는 아동이 위탁가정 등으로 보내질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진행함.
- 가족 내 복합문제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의 사례회의 가능(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요)
- 대안양육체계(위탁가정, 그룹홈 등): 사례조사 사회복지사와는 별도로 위탁가정을 선별 및 심사하고 연결시키는 부서가 있으며, 이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음.

■ 미팅 5 (스웨덴)

□ 일시: 2018.10.26.(금) 10:00-12:00

□ 장소: Stockholm University

□ 참석자: [원내]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류정희 연구위원

[원외] 변영환 박사(스톡홀름대 사회정책연구소), 김이진 전문위원  
(사보위)

□ 회의내용

- 스웨덴 사회정책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변영환 박사와의 인터뷰로 다소 민감한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
- 스웨덴은 자신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최근 외부에서 보기에는 많은 동요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음. 이와 관련해서 현지인들에게 질문하기 힘든 사항이 많음. 최근 정치세력 중 극우파의 부상이 미친 영향이 있는가
- 스웨덴의 고용보험제도와 관련된 개혁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
  - 스웨덴 고용보험은 상대적으로 실업위험이 높은 집단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임. 이는 통상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을 분산하는 (pooling) 사회보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 이 조항은 스웨덴 극우정치세력의 요구에 의해 정책에 반영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매우 민감
  - 더욱이 산재보험에서 산재발생 위험율이 높은 업종에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을 조율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한 것임. 하지만 실업문제에도 이러한 부담의 부여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
- 향후 내각구성 그리고 선거에서 사민당이 주도권을 장악한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할 것임

## ■ 미팅 6 (스웨덴)

□ 일시: 2018.10.26.(금) 17:00-20:00

□ 장소: · Kalmar 시내

□ 참석자: [원내]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류정희 연구위원

[원외] 최연혁 교수(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 H. Sandstrom교수

(Kalmar대학), G. Bravo 교수(Kalmar대학), G. Sjostrand 박사  
(Kalmar대학), J. Ewald 박사(Kalmar대학), Lars Sornsen 박사  
(Linnaeus대학)

□ 회의내용 (통역 : 최연혁 교수)

- 한국정부는 현재 2040년의 미래에 대비한 사회보장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사회보장개혁 동향을 관찰하였고, 이어 스웨덴의 연구자들에게서 그 함의를 듣고자 함. 스웨덴 사회보장체계 개혁의 경험과 그 시사점은 무엇인가(질문)
- 스웨덴의 사회보장체계 개혁은 평균 30년 주기
  - 사회보장체계를 바꾸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많은 시간과 인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임. 스웨덴은 1930년대 이후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사회보장의 체계를 바꾸는 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특히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 사이에 오랜 시간을 들여 타협과 합의를 도출하는데 애를 써 왔음
  - 한번 큰 개혁을 하면, 그것이 오랜 시간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 단기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서 개혁을 한다면, 그것은 개악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증가
- 1990년대의 사회보장개혁을 전후한 중요한 차이는 무엇인가
  - 스웨덴은 1930년대 이후의 30년을 <강한 연대>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개혁을 추동해 왔음. 그것은 노동자와 기업이 연대하지 않고서는 위기를 타개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이후 1960년대~1990년대까지의 개혁은 <강한 국가>로 압축할 수 있음. 더 많은 사회보장세를 부담하면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것임. 실제로 스웨덴에서 정치학의 가장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정부의 질> 또는 <통치의 질>이라고 말할 수 있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관심이 이를 말해줌
  -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개혁은 <강한 개인 - 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음. 그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의 도전을 설명하고

들 있지만, 사실 개인의 역량이 강하고 자율성이 강해야 사회가 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비전을 함축하고 있음. 이는 교육과 투자 그리고 각 개인이 실제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 2018년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정부에 주는 조언은?

- 경제사회여건이 다른 국가에 북유럽의 모델을 선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잘 모르겠음. 하지만 먼 미래를 보고 개혁을 한다면, 시민들이 원하고 가야할 길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러한 수고 없이 성공적인 개혁은 없음

## ■ 미팅 7 (스웨덴)

□ 일시: 2018.10.27.(토) 19:00-21:00

□ 장소: Stockholm University

□ 참석자: [원내]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류정희 연구위원

[원외] 변영환 박사(스톡홀름대 사회정책연구소), P. Fallesen박사  
(스톡홀름대 사회정책연구소)

□ 회의내용

○ 기관 간의 향후 협력방안

- 스톡홀름대 사회정책연구소는 오랜 시간 스웨덴의 대표적 사회보장 분야 전문 연구기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많은 연구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협력을 통해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에서 향후 스웨덴 스톡홀름대 사회정책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의 MOU 체결 가능성 등에 대해 타진

○ 스웨덴 전문가의 원고를 국제사회보장리뷰 및 영문워킹페이퍼로 발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